

# KDF

## 민주주의 리포트

Issue & Review on Democracy

2022년 7월

제74호

# 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의 양극화를 중심으로

신 희 주

가톨릭대학교

발행일 2022년 7월 2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문의처 [edit@kdemo.or.kr](mailto:edit@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 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의 양극화를 중심으로

신 희 주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불평등을 주로 연구 주제로 삼고 있으며 최근엔 건강불평등과 불안정 노동시장, 산업재해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1990년대부터 심화된 경제의 서비스화의 경향과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에 기인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등 현재 한국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으로 귀결된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 역시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노동인데, 노동유연화가 극대화된 디지털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다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에 놓여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전체 자산가치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피케티 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노동과 자본간 불평등 역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임금 인상과 고용안정성의 확보, 고용형태의 변화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제도적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동자성 인정을 비롯해 대안적 소득보장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국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은 시대적 화두로 자리 잡았다. 불평등은 자산, 소득, 성, 세대, 지역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준에서 그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4차산업혁명, 탈산업사회, 디지털 사회 등으로 일컬어지는 사회적 구성원리와 생산체계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집단들을 출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불평등의 양상 역시 이전과는 다른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전 세계적 사회체계의 변화와 함께 생산과 노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우리 사회 계층 불평등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결론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 2 노동시장 양극화의 구조적 맥락

### 1) IMF 경제위기와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1997년 IMF 경제위기는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시킨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된다. 불평등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설명할 때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당시의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IMF에 의해 제시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엄격한 통화관리, 긴축재정, 시장개방,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최소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핵심을 이룬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의 회복, 외환보유고의 증가 등 경제위기를 넘어서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구조조정에 따르는 고용불안정의 심화, 실업률 증가, 비정규직 증대 등 장기 지속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조돈문, 2008).

한국의 신자유주의화는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시기 한국의 국가는 이전의 발전국가적 개입양식 대신 금융화를 통해 자산소유자들의 권리를 확대시켜 자본축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그 제도적 형태가 변화한 국가형태라 볼 수 있다(지주형, 2016). 이전의 포드주의적 축적체제가 고임금과 케인즈주의적 복지체제를 기반으로 대량생산에 대응하는 대량소비체제를 확립시켰다면, 신자유주의에서의 축적체제는 높은 수준의 노동소득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자산투자를 장려하여 그로부터의 소득으로 노동소득을 상쇄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축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유리하고 가계소득에서 노동소득의 비율이 큰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Duménil & Lévy, 2001). 특히 87년 체제 이후 확립되고 확대된 노동계급의 조직적 영향력이 후퇴하고 집단교섭력은 약해지면서 고용관계에서 개별계약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고, 이것은 다양한 방식의 비정규직 확산, 유연임금의 확대 등으로 나타나며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지위를 크게 약화시키게 되었다(장귀연, 2011). 게다가 당시 한국의 신자유주의 국가는 정리해고, 파견근로자제도와 같은 노동개혁 내용을 IMF의 요구 내용처럼 포장하여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가속화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경제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었다(지주형, 2016).

### 2) 경제구조의 서비스화 (Tertiarization)

그러나 노동시장의 변화는 IMF 경제위기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고용구조는 농업·광업 등 1차 산업의 급격한 축소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후 탈산업화, 급속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신자유주의의 확산 등 경제·사회 구조의 심대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근본적으로 고용구조

및 노동 조직 방식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최근에는 꾸준히 진행된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되어 제조업의 하락세 속에서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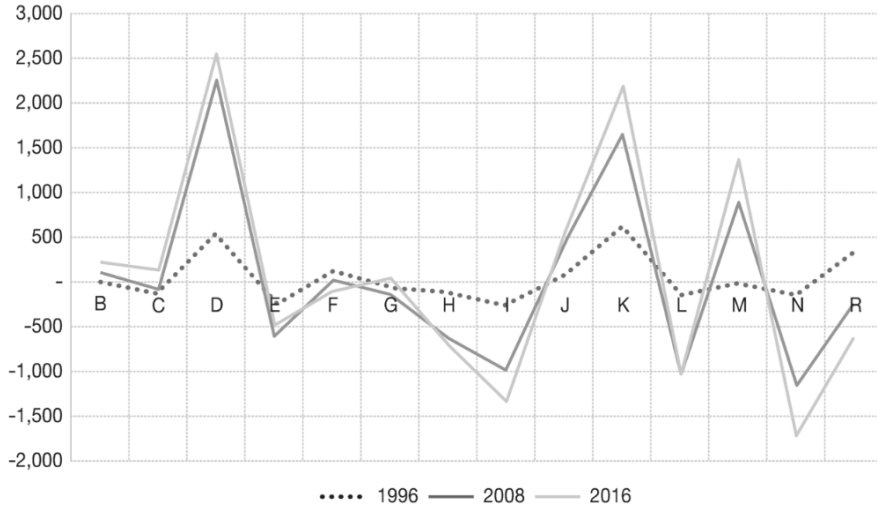
보몰의(Baumol)의 성장 질병(growth disease) 이론은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에서 고용이 줄고 여기서 퇴출된 노동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유입되면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고용은 상승하지만 서비스업의 저생산성은 결국 전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서비스 사회의 특징을 잘 설명한다(Baumol, 1967). IMF 위기 이후의 한국경제에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이 성장하는 방식 자체에서 양극화 경향이 나타난다. 제조업은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자체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했지만, 서비스업은 고용 증가를 통해 그 규모가 성장했다. 즉, IMF 이후 서비스화 과정속에서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매우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생산성 향상을 이룬 대신, 서비스업은 잉여노동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생산성 격차가 증가되었다(안정화, 2008; 반가운, 2010).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생산성 순위는 매우 높고 고용 비중효과는 매우 낮은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정반대의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의 경험은 경제의 서비스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8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증가한 취업자 수는 대부분 제조업이 아닌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으로 흡수되었다. 특히 산업별로 성별 고용비중의 변화가 매우 컸는데, 전형적인 서비스업종인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에서 차지하는 여성들의 비율은 남성들의 비율을 앞섰다(이덕재,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여성의 고용률이 OECD 평균 이하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는 공공서비스의 고용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현대사회의 불평등에서 중요한 이유는 재정건전성, 소득의 평등, 고용 성장 이 세 가지를 함께 달성할 수 없는 트릴레마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이덕재, 2018; Iverson and Wren, 1998). 다시 말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분야가 비대해지는 서비스 사회에서 제조업 시대의 성장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고용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산성 격차가 커지는 산업들 간 평등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과 고용률은 OECD 국가들 중 높은 편이지만, 빈곤율과 공공사회지출 비중으로 나타나는 소득평등의 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며, 산업별 임금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그림 1 참조). 결국 한국은 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용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낮은 비용의 민간 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에 집중한 것이다. 경제의 서비스화가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위기의 충격이 한국적 형태의 특수한 경제구조를 만들었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수성은 경제/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혹은 양극화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관성을 부여하였다(이덕재, 2018).

〈그림 1〉 외환위기 이후 산업별 임금변동 꺾



B	광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C	제조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K	금융 및 보험업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F	건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G	도매 및 소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H	운수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자료: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각 연도, 이덕재(2018)에서 재인용

### 3 불안정 노동의 증가: 노동의 양극화

#### 1) 프레카리아트의 출현

196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포디즘적 축적체계에서 보장되던 고임금과 고용 안정성은 1980년대를 지나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해 침식되기 시작하였다. 노동 안정성의 침식과 함께 노동자들이 취약한 조건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빈곤이 창출되었고, 고용뿐 아니라 정치, 문화의 영역에서도 배제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신경아, 2019). 최근 부상하고 있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에 대한 논의는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레카리아트는 고용형태의 불안정성에 주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프레카리아트로 규정하기도 하고, 정규 노동자들을 포함한 임금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된 집단에서 불안정성을 가진 사람들로 폭넓게 정의되기도 한다. 또한, 마르크스의 전통적 계급 범주에서 배제된 막대한 인구집단을 무산자계급 범주로 포괄하고 이러한 개념에 불안정성이라는 특성에 초점을 두어 프레카리아트를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곽노완, 2020). 이는 공유자산이 수탈당한 무산자, 즉 소득과 사회보장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다는 사회적 임금의 불안정성을 강조한다.

전통적 노동시장 구조에 기반하여 프레카리아트의 지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우선, 여전히 규범적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역의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점점 단기적 시장의 명령에 노출되어 가는 경향이 있으며, 가장 하위에는 법적 보호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프레카리아트화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집단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단기적/중장기적으로 고용시스템에서 배제된 잉여의 영역이 있다. 이 두 영역 사이에 프레카리아트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프레카리아트는 시간제노동, 파견, 용역, 저임금의 자영업 등의 형태와 같이 매우 유연한 고용관계 속에 놓여 있다(임운택, 2015). 그러나, 서비스화된 경제의 특성은 고용형태나 경제활동 상태가 고정되어 있다기보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의 고용형태나 개인들의 속성은 다른 시점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계급 관계상의 지위에 기반하여 프레카리아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신광영, 2004).

백승호는 불안정성의 경험은 유사한 직종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공유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국에서의 프레카리아트 계급을 정의한다. 숙련도와 작업방식을 두 축으로 하여 구분되는 직업 범주에 기초하여 계급을 구분한 Oesch를 참고로 하여(표 1) 참조), ①전통적 부르주아 계급, ②소상공인 계급, ③기술 전문가, ④생산직 노동자, ⑤관리자, ⑥사무원, ⑦사회문화 전문직, ⑧하위서비스 노동자로 분류하고, 이 중 생산직 노동자와 하위서비스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정, 소득 불안정, 사회적 임금 불안정이라는 세 가지 불안정성에 노출된 채 프레카리아트화 되어가는 집단으로 부른다. 여기에 더하여 노동시장 밖에 있는 장기실업자와 잠재적 실업자(경계노동자와 취업준비자) 집단도 프레카리아트화 되어 가는 불안정 노동집단으로 분류한다(백승호, 2014). 이렇게 계산된 프레카리아트화 집단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1〉 서비스경제에서의 계급구조 (by D. Oesch)

작업방식(work logic)					
독립적 (independent) 작업방식	기술적 (technical) 작업방식	조직적 (organizational) 작업방식	대인적 (interpersonal) 작업방식		
(1) 고용주 (피용인 5인 이상) 자영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등)	(4) 기술 전문가 (컴퓨터전문가등)	(8) 고위 관리자 (공공서비스 행정가 등)	(12)사회문화전문가 (대학 교수 등)	전문/ 관리직	숙 련 도
(2) 뿌띠 부르주아 (피용인 4인 이하) (레스토랑경영자등)	(5) 기술자 (전기기술자, 안전검사원 등)	(9) 준관리자 (소규모기업 관리자 등)	(13)사회문화 준전문가 (초등학교교사등)	준전문/ 관리직	
(3) 피용인이 없는 자영자	(6) 숙련장인 (목수 등)	(10)숙련사무직 (비서 등)	(14)숙련서비스직 (요리사 등)	일반/ 직업적 숙련	
	(7) 단순 기능공, 농림어업관련 단순종사자	(11)일반사무직 (점원 등)	(15)일반서비스직 (가사 도우미 등)	낮은/ 비숙련	

※ 자료: 백승호(2014)

고용불안정이 하위 서비스 노동자와 생산직 노동자 계급에 집중되는 것은 비정규직화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숙련도에 따른 차별적 유연화 전략에 의해 설명된다. 이 두 집단은 수량적 유연성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저숙련 집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위 서비스 노동자들의 소득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은 서비스 경제화의 과정에서 숙련분화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최근의 숙련분화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점점 더 크게 나타나며, 서비스업 규모의 증가로 인해 이 집단 간 임금불평등이 전체 임금불평등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백승호, 2014).

프레카리아트화가 특별히 더 위험한 점은 프레카리아트는 전통적 의미에서 노동계급과는 다른 두 가지 차원에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들은 계급지위로서 불안정한 노동자, 즉 산업적 시민권(노동시장 접근성, 고용, 직무, 노동안전, 숙련 축적, 소득, 단체협상권에 대한 보장 등)을 박탈당한 사람들로 일시적인 일자리를 떠돌아다니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계급 성격으로서의 불안정성인데, 노동에 기반을 둔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과 관련된 사회적 집합기억, 안정적 관행, 공통의 행위규범, 직업공동체에 대한 소속감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Standing, 2014).

## 2) 새로운 형태의 노동 불안정: 플랫폼 노동자들

기업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등장한 디지털 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즉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 자체를 변형시키는 방식에서 찾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유연화는 더욱 극대화되었다. 디지털 경제에서 자본과 기업은 생산성 향상 및 자원 절약, 인력부족 극복, 자동화를 통한 높은 노동비용 경감 효과를 얻는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 몇 년 간 플랫폼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고용형태에 따른 경계가 불분명한 노동시장이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국미애, 2020).

플랫폼 노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문제 해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나 소득을 얻는 일자리로 정의된다(ILO, 2018a).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을 중개하되 전통적 방식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 사업자로 분류되고 인식된다. 기술발전과 경제의 서비스와 맞물린 노동시장의 변화로 플랫폼노동은 ‘사용자 없는 고용, 고용 없는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이다(김종진, 2019).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자’를 기준으로 하던 국제고용지위분류를 2018년 ‘종속적 노동자’와 ‘독립적 노동자’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변화하는 고용관계를 반영하는 변화이다(〈그림 2〉 참조). 이 분류에서 ‘종속적 계약자’는 가격 결정권이 없거나 매우 약하고,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고정급여를 받지 않으며, 고용원이 없고 비법인 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전에 자영업자로 분류되던 플랫폼 노동자들과 프리랜서들 대부분이 종속적 계약자로 새롭게 분류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배달·배송·운전, 데이터

입력, 가사·청소·돌봄 등 종속적 계약자로서의 노동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역시 특정/불특정 클라이언트와 일을 하는 것에 생계를 의존하면서 업무수행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지시를 받는 의존적 자영업자로서의 특성이 강해서, 전문성이 높은 매우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을 종속적 계약자로 분류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림 2〉 국제고용지위분류 개정

개정 전		⇒	개정 후	
임금근로자 (Employee)	자영자 (Self-employer)		종속적 노동자 (Dependent Worker)	독립적 노동자 (Independent Worker)
기간 정함 없는 노동자	고용주(고용원 있음)		기간 정함 없는 노동자	고용주(고용원 있음)
기간제 노동자	자영업자(고용원 없음)		기간제 노동자	자영업자(고용원 없음)
임시·단기 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	⇒	임시·단기 노동자	
유급 견습·훈련생/인턴			유급 견습·훈련생/인턴	
			<b>종속적 계약자</b>	
			무급가족종사자	

※ 자료: ILO(2018b)

ILO의 국제고용지위분류 개정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경제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ILO는 지난 10년 동안 지역기반형(local based) 플랫폼은 10배 이상, 웹기반형(web-based) 플랫폼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ILO, 2021). 최근 한 연구는 한국에서의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를 전체 취업자의 2.6% 규모로 추정하였다(김준영 외, 2021). 플랫폼 노동의 규모 추정은 플랫폼 노동 측정 방법이나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21년 이전까지 플랫폼 노동 규모가 전체 취업자 중 대략 1.8%에서 2.2% 정도로 추정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 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플랫폼 노동이 수입의 불안정, 사용자 평가에 대한 의존성, 플랫폼과 플랫폼 노동자들간 정보의 비대칭성, 직업 훈련으로부터의 배제, 분쟁 해결 절차의 부재 등 고용의 질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적 형태의 플랫폼 노동도 전형적으로 저숙련 노동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고용관계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의 부재가 수량적 유연화와 결합되어 더욱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구성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 다수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제와 같이 임금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플랫폼 종사자의 30% 가량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현재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거나



임의가입 등을 통해 가입한 사람들은 그 중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 역시 30%가량에 머물고 있다(김준영 외, 2021)

플랫폼 노동은 고기술의 숙련 노동자는 고용안정과 높은 임금을 받지만, 저숙련 노동자나 그 밖의 집단은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을 받는 등 고용의 질 차원에서 또한 양극화되어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김종진, 2019).

#### 4 불평등은 노동시장 내부에서만 나타나는가? 노동과 자본간 불평등의 심화

지금까지 본고에서 살펴본 불평등은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 즉 노동계급 내에서의 양극화 경향을 주로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은 노동계급 내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불평등의 심도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 간 분배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이병희, 2016).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내부의 양극화 현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주변부화 되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노동자 계급 내부에 그 책임이 전가되는 정치 논리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과 노동 간 불평등의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알려져 있다. 10조 자산가인 쿠팡 이사회 의장 김범석은 2020년 한 해 동안 연봉으로 158억을 챙겨가는 동안, 쿠팡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과로사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대한항공 노동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순환휴직 등으로 급여가 평균 15% 감소하고 하청 노동자들은 대규모의 임금삭감과 해고를 경험하였지만, 대한항공의 소유주인 한진그룹 회장은 전년도에 비해 소득이 40%가 늘었다.

우리에게 알려지는 이러한 단편적 사실들을 분석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급 간 불평등은 추정 방식도 다양하며 불평등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의 신뢰성 문제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 토마 피케티에 의해 제시된 방식은 연구자들에 의해 광범위한 인용이 이루어졌다.

'피케티 지수'는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눠 계산된다. 한 국가의 전체 부를 전체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이 지수가 높을수록 노동이 가져가는 몫에 비해 자산/자본이 차지하는 몫이 커진다. 즉, 한 사회에서 노동소득보다 자산의 이익 창출 효과가 훨씬 높은 '자산 분포의 불평등'을 의미하며 자산 보유 계급의 부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 2>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에 의하면 (ECOS)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은 2014년 9.4에서 2019년 10.7로 상승했다. 특히 국민순소득이나 명목GDP 에 비해 부동산과 토지 등의 자산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의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2〉 토지자산과 피케티 계수의 증가율

## 토지자산과 피케티 계수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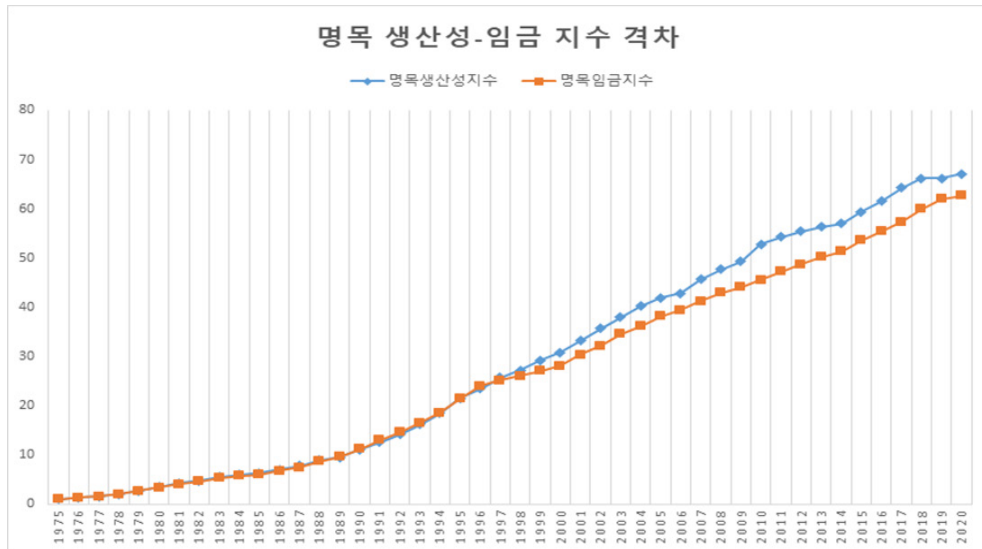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국민순자산 (A)	11,995.7	12,728.4	13,525.7	14,314.0	15,563.8	16,621.5	7.7%
국민순소득(NNI) (B)	1,275.3	1,353.5	1,424.3	1,503.5	1,546.7	1,554.2	4.4%
토지자산 (C)	6,209.8	6,571.4	7,146.5	7,638.9	8,225.6	8,767.0	8.2%
명목GDP (D)	1,562.9	1,658.0	1,740.8	1,835.7	1,898.2	1,919.0	4.6%
토지자산/명목GDP (C/D)	4.0	4.0	4.1	4.2	4.3	4.6	3.0%
피케티 계수 (A/B)	9.4	9.4	9.5	9.5	10.1	10.7	2.7%

※ 자료: 용혜원 의원실

그런데, 이러한 피케티 지수의 증가로 보여지는 구조적/계급적 불평등은 거시적인 경제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상황과 연동되어 있다. 실질임금 인상률이 생산성 향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장기적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피케티 지수가 커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실질임금 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약간 미치지 못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저임금 비정규직의 대규모 양산,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하락으로 인해 실질임금 인상률과 생산성 증가율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김유선, 2019). 〈그림 3〉에서 보듯,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지수와 임금지수 간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눈에 띄는데, 이렇게 노동생산성과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은 노동이 생산한 잉여가치에서 자본이 점유하는 비율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생산성-임금 괴리 문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동자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의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몫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생산요소 간 공정한 분배에 대한 요구는 분배적 정의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 그리고 민주적 정치과정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림 3〉 생산성-임금 지수 격차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5 결론

앞서 제기된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적 차원과 노동시장 외적 측면에서 몇 가지 구조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산직과 서비스직 노동자의 불안정성은 비정규직의 증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최저임금의 인상 등을 통해 임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은 산업, 업종, 기업 규모 등과 무관하게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한다는 정책으로, 스웨덴의 노동계급 내 임금 격차를 성공적으로 해소하는데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다수의 사용자와 노동자 간 중층적 계약으로 특징지어지는 간접고용은 용역회사나 파견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에 대한 중간착취로 인해 임금, 고용안정성, 사회적 권리 등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을 형성한다. 이러한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임금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영역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도적/법적 보호의 사각이 형성되지 않도록 종속적 계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전면적 개혁, 고용보험의 폭넓은 적용, 기본소득 등의 대안적 소득 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소득 보장에 있어 고용관계를 벗어난 '일하는 사람들'로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향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적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국가는 누진세의 확대를 통한 세수 증대로 소득 재분배를 수행하는 적극적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현물 급여 중심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탈 시장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교육, 보건의료,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제공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가이 스탠딩, 2014,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고양시: 박종철 출판사
- 광노원, 2020.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의 확대: 플랫폼 자본의 인클로저 vs. 플랫폼 공유지배당." 마르크스주의 연구 17(1): 98-119.
- 국미애, 2020. 『서울시 플랫폼 영역 여성노동 실태분석』,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김유선, 2019.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임금 없는 성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7, 1-10.
- 김준영, 장재호 김강호 박상현, 2021. 『플랫폼종사자의 규모와 근무 실태』,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반가운, 2010.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서비스화와 구조변화의 특징." 노동경제논집, 33(1): 85-107.
- 백승호, 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21(2): 57-90.
- 신경아, 2019. "노동의 불안정성과 젠더". 페미니즘연구 19(1): 173-206
- 이강국, 2019.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한국경제포럼 12(2): 73-94.
- 이덕재, 2018. "경제사회양극화와 '트릴레마': 산업구조 및 고용체제의 변동". 경제와사회 119: 14-41.
- 이병희, 2016.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구소득 불평등 관계". 산업노동연구, 22(2): 79-106.
- 임운택, 2015. "금융시장 자본주의와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 경제와사회 107: 12-43.
- 장신철, 2012. "비정규직 범위와 규모에 대한 새로운 고찰", 산업관계연구, 22(1): 55-77
- 조돈문, 2008.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경험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경제와사회 79: 184-213.
- Duménil, G. and Lévy, D., 2001. "Costs and benefits of neoliberalism. A class analysi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8(4): pp.578-607.
- ILO, 2018a. Digital labour platforms and the future of work: Towards decent work in the online world, ILO.
- \_\_\_\_\_. 2018b. "Data collection guidelines for ICSE-18", ILO
- \_\_\_\_\_. 2021. "Digital labour platforms and the redefinition of work: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workers".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21, 133-194.
- Iversen, Torben, and Anne Wren. 1998. "Equality, employment, and budgetary restraint: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orld politics 50(4): 507-546.

## 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의 양극화를 중심으로

**발행일** 2022년 7월 2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